거리두기 해제로 활기 넘치나 했는데…

광주 자영업자 짓누르는 '3중고'

① 배민 배달수수료 인상
② 치솟는 식자재 가격
③ 일손 구하기 어려워

"손님·매출 늘어도 남는 게 없어" 생각하지 못한 악재들 많아 울상

광주 자영업자들이 3중고에 시달리며 울상짓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풀려 신바람나게 장사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대 배달 플랫폼 기업의 배달 수수료 인상과 치솟는 식자재값, 구인난 등 3가지 어려움과 맞닥뜨리면서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26일 점심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인근 복어요리 식당에서 60대 여주인은 단골손님들 눈치만 살폈다. 무슨 말을 꺼내려는 듯 단골손님 주변을 맴돌다 이내 카운터로 돌아간 주인은 손님의 한마디에 반색하며 말문을 열었다.

한 40대 직장인이 계산을 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 웬만한 식당들 음식가격 올린다던데 여기는 괜찮은가요"라고 묻자 "복어는 물론 식재료라는 식재료는 모두 가격이 올라 음식값을 좀 올려야 하는데 손님이 줄게 될까 걱정돼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날 광주시 동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 역시 한숨을 푹 쉬었다.

코로나 유행이 주춤해져 손님이 늘고 매출도 늘었지만, 팔면 팔수록 몸만 고되고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였다. 주인 김씨는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버티면 좋은 날이 올 줄 알고 버텼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버티고 있었다"며 "무슨무슨(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때문에 밀가루랑 식용유 가격은 갑절 가까이 올랐지, 웬만한 돈주고는 알바도 못구하지 몸만 축난다"고 했다. 김씨는 "분식집이란 게 싼 맛에 찾아오는 거라 섣불리 가격을 올렸다간 있던 손님도 끊길까봐…"라며 말끝을 흐렸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의 민족'에 대한 수근거림도 많았다. 배달 전문 플랫폼(앱)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배달의 민족'을 원망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 초 배달체계에 변화를 줘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내야할 배달 수수료 인상 효과를 가져온데 이어, 28일부터는 앱에 노출된 광고만 클릭하면 식당 등 자영업자가 사전에 맡긴 예치금에서 차감하는 신규 상품을 출시한다.

북구 용봉동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손모씨는 "이달 초부터 배달 한건당 기본거리1.5㎞당 2900원이던 배달 수수료가 350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100m씩 거리가 추가되면 100원씩 늘고 행정동이 바뀌면 300원이 추가돼 기본 배달료만 5000원이 된다"고 했다.

손씨는 "2년 간의 코로나 영향으로 매장 손님은 줄고 배달 손님은 늘어 배달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며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배달의 민족이 앱에서 식당 홍보 광고상품까지 내놔 식당들을 경쟁시킨다고 한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요식업계에선 일부 식당의 경우 음식값보다 배달수수료가 더 비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전해지는 상황이다.

일손 구하기도 자영업자들이 넘어야 할 벽이다.

주간 손님이 늘고 밤샘 영업이 허용되면서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구하려는 식당, 노래방, PC방 등 업체는 많은데 종업원이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는 게 자영업자들 설명이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광주지역 올해 1분기 등록 구인 공고수는 6만494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3.1%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구인공고 건수도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다.

북구 용봉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3주째 식당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내고 있지만 문의도 별로 없다"며 "최저임금(9160원)보다 높은 1만~1만5000원대 시급 알바 구인 공고를 내도 쉽게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주변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고 전했다.

문행우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영업자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에 시간을 쪼개 단기 알바를 구하려는 사례가 많고, 청년들은 단기 알바보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에 전념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실업자나 구직자 지원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함께 20~30 미취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식이나 코인 등 재테크에 관심을 쏟으면서 구직시장에 나서지 않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은 26일 오전 광주시 동구 YMCA무진관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36주기를 맞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사건 인사이드

'한달 유치장 신세' 여성 스토커 어쨌길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직장동료 집 침입해 청소하고 요리

'택배 보내기, 집에 찾아가 무작정 기다리기,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전화하기, 집안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요리하기'

남성이 싫어하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40대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됐다.

26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인 A씨가 받는 혐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1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수년전 같은 직장에서 일한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에 찾아오거나 음식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참다못한 B씨가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1~3호를 잇따라 내렸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하는 처분이다.

접근금지와 함께 잇따른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10일 B씨가 없는 틈에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요리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B씨에게 호감이 있어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약과 반찬을 챙겨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 후 별거상태고 B씨는 미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 지난 14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 15일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다음달 13일까지 구금 상태로 지내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분양권 노려 명의신탁' 지산1구역 소유주들 혐의 부인

분양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대상지 주택 소유주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6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 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9년 전후로 지산1구역 사업지 내 원룸 등을 사들이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녀 등 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중 1명은 재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수수료 가액인 615만원을 초과해 3375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 6명 모두 가족이 스스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수 자금을 증여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 거래 역시 모두 정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지산1구역 '지분쪼개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14명을 넘겼으나 검찰은 지분쪼개기 자체는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보고, 명의신탁 관련 혐의로만 6명을 기소했다. 광주시 동구 공무원 등 나머지 8명은 재개발사업 내용 무단 열람(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송치됐으나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생존수영 교실 보조금 유용' 광주수영연맹 등 압수수색

경찰이 광주 생존수영 교실 보조금 유용 의혹 규명을 위해 광주시수영연맹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광주시청,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수영연맹, 남구 다목적체육관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최근 광주시의원이 제기한 '2019년 광주 생존수영 교실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내사를 거쳐 사업비 5000만원이 집행된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지난 15일 사업 관련자 3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입건자 3명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시체육회, 남구 다목적체육관, 시수영연맹 등 전·현직 관계자들이다. 입건자 중 1명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모 자치구 의원 공천 신청을 한 인물로 현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반재신 광주시의원(민주당·북구1)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반 의원은 당시 "2019년 생존수영 교실 정산서에는 인건비 37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등 약 5000만원 예산을 들여 시민 320명에게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남구 다목적체육관 등 생존교실 수업 장소에서 실제 수업이 이뤄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업비 흐름도 수상쩍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